

'싱가포르 북미회담' 막전막후 판문점·평양·제네바 물망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판문점이 유력시되다 막판에 싱가포르로 굳어진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 개최 사실은 지난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했을 때 공유받았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우리나라는 판문점을 추진했고, 북한 측은 평양을, 미국 측은 스위스 제네바를 적극적으로 제안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전했다. 하지만 비행거리, 경호, 보안, 정치적 상황 등의 이유로 제3국가인 싱가포르로 최종 낙점됐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개최 발표' 관련 "싱가포르는 보편적이고 현실적 방안이라 생각한다"면서 "미국 측과 북한 측 협의과정에서 미국은 제3국가 제네바를 더 선호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감안해서 싱가포르가 선택됐다. 북한은 평양을 제안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남북 정상회담 직후 열린 지난달

28일 한미정상통화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로 판문점과 싱가포르가 집중 논의됐다고 한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도 한번 언급이 됐다고 한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송도 투자를 검토한 적이 있으며, 아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답사 차원에서 2011년 송도를 방문했었다.

비행거리·경호·보안 등 이유로 최종 낙점돼 靑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담' 기대감 놓지 않아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송도 언급은 의미없는 수준이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통화 내내 (북미회담 장소로서)판문점과 싱가포르 장단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면서 "당시 1순위는 판문점이었다. 가장 많은 대화가 이뤄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질문이 많았던 장소도 판문점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의 분위기, 회의를 할 만한 장소였는지, 정확한 회담 위치는 어떠한지 등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통화를 마친 직후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판문점 우리 측 관할건물 'Peace House/Freedom House(평화의집

/자유의집)'을 언급하며 "Just asking(물어보는 것이다)"이라고 여론을 살피기도 했다. 이에 판문점 낙점 기대감은 커졌다.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 유력' 분위기는 지난 4일(현지시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하면서 반전됐다. 당시 정 실장은 한반도 정세와 북미회담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오

는 22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워싱턴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했다.

정 실장은 볼턴 보좌관과 만나면서 '북미 정상회담은 6월 12일 또는 13일 싱가포르 개최로 결정됐다'는 내용을 전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정 실장의 귀국 보고를 받았지만 최종 발표까지 판문점 낙점 기대를 놓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종 결정까지의 유동성이 남아있어 지켜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개최 의지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 보였다"면서 "지난 4일(정의용 실장과 볼턴 보좌관 회동에서) 싱가포르 북미회담 결정)통보를 받긴 했지만 마지막 발표까지 변동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확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문 대통령에 정상통화를 요청해 "북미 정상회담 일시와 장소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다음달 12일 싱가포르

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직접 공개 발표했다.

지난 9일 북미 정상회담 통화에서 배석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개최지로 판문점이 배제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안한 감정이 느껴졌다"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전화 통화를 했던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미 정상회담 장소로서 판문점 대안이 살아있나' 질문에 "그럴 수 있다"면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개최됐다면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만나고, 문 대통령이 합류해서 남북미 3자 회담으로 이어져 자연스러웠을 것이다. 우리가 판문점을 선호한 이유 중 하나"라면서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런 문제도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다고 해도, 남북미 정상회담 장애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민평당 전북도당 지선 출정식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13일 오후 2시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하는 출정식과 선대위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 출정식에는 평화당 소속 국회의원은 물론 권노갑 상임고문과 정대철 상임고문을 포함한 중앙당 고문단이 총 출동했다.

도당은 이번 출정식에 각 시군 등에서 5,0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임정엽 도지사 예비후보 등 지역 출마자 전원이 모여 지방선거 필승을 다짐했다.

정진숙 도당 사무처장은 "평화당 도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도민의 하나 된 마음을 이 자리에서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3선 홍영표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홍 의원이 소속의



원 116명 중 78표를 얻어 새 원내대표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홍 신임 원내대표와 양자 대결을 펼쳤던 노웅래 의원은 38표를 얻었다. 무효표는 없었다. 홍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수락 연설에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는 원내대표, 국정을 주도하는 책임 여당의 원내대표가 되겠다"며 "국회가 이렇게 계속 파행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국회를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 징역형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에 대비해 입당원서를 받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52·충북 제천단양)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뉴시스

지난해 국내입양률 53.9%

국외입양 46.1%로 2015년보다 줄어... "복지부 대책 절실"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입양의 날' (2006년 제정. 매년 5월 11일)을 맞이한 가운데, 2017년 국내 입양률이 53.9%에 불과하고 2015년 64.6%



에 비해 10.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복지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갑, 민주평화당·사진)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국내·외 입양통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입양아동 863명 중 국내입양은 465명으로 53.9%, 국외입양은 398명으로 46.1%로 국내입양이 간신히 절반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5년 64.6%(전체 입양아동 1,057명 중 683명)를 기록했던 국내입양률은 2017년 10.7% 감소한 53.9%(전체 입양아동 863명 중 465명)를 기록

했다. 또한, 국내입양은 2015년 683명에서 2017년 465명으로 30%가 넘는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반면 국외입양은 2015년 374명에서 2017년 397명으로 증가해 대조를 보였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국내·외 입양아동의 수는 2015년 1,057명(국내 683명, 국외 374명), 2016년 880명(국내 546명, 국외 334명), 2017년 863명(국내 465명, 국외 397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7년 입양된 아동은 863명으로, 2015년 1,057명에서 18.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0년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의 수가 4,046명을 기록한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입양아동의 발생 유형별 현황을 보면, 1,694명의 국내입양 아동 중 미혼모아동이 1,516명으로 전체 89.5%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유아동이 92명(5.4%), 결손가정 아동들이 86명(5.1%)이다.

국외입양 아동 1,106명 중 미혼모아



"사랑합니다"... 남측예술단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11일 청와대로 남북평화 협력기원 남측예술단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했다. 문 대통령 내외가 오찬 후 예술단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은 1,082명으로 전체 97.8%로 나왔으며, 기아 등으로 인한 국외입양 아동은 18명(1.6%), 결손가정 아동이 6명(0.5%)이다.

김광수 의원은 "2012년부터 시행한

입양특례법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하고, 특히 제3조에서는 국내입양 활성화 등의 책무를 지닌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과거에 비

해 입양대기아동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은 반가운 일이나, 동시에 국내로 입양되는 아동의 비율 역시 감소하고 있어 복지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